

특허 심사 단축 vs 통신 조회 근절

이재명·윤석열 소공약 대결 연일 공약 대결로 정책 부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0일 소공약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특허심사기간 단축'과 '수사기관이 개인통신자료 조회 시 본인 알림 의무화'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SNS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지속적 증가와 치열한 기술 경쟁으로 특허출원이 늘어나는 변화 추세에 맞춰 신속한 행정을 제공해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특허기간 단축'을 제시했다.

또 이 후보는 "우선 스타트업, 혁신기

술 등을 상대로 3개월 만에 심사가 가능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고 특허청 조직 효율화를 통해 특허 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대 1000명의 석·박사급 퇴직 인력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일반 심사 기간을 현재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특허심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되며 평균적으로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한다. 이는 지난 14일 이재명 후보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인 간담회에서 한 참가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해 이 후보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전기통

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시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제도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통신사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는 매년 수백만건의 통신사 가입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직접 확인해보기 전에는 인지할 수 없으

를 찾고 이는 통신사들이 가입자 본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으나 사찰 성격으로 남용되는 안된다며 수사의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일 내에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려주는 개선안을 전했다.

윤석열 후보의 이날 공약은 그간 국민 의힘 측이 "공수처가 야당과 언론을 넘어 일반 국민까지 통신조회를 했다(1월 14일 원일회 대변인 논평 中)"고 주장한 내용을 담아낸 공약이라 해석된다.

홍정윤 기자



신정현 경기도의원은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제정 관련 좌담회'를 개최해 토론을 벌였다. (사진=경기도의회)

청소년 권리증진·기본권 내실화

신정현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민주당, 고양3) 의원은 지난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및 민주시민 성장지원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제정 관련 좌담회'를 개최했다.

신정현 도의원은 "청소년은 미래 사회를 견인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청소년의 현재적 존재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주체적인 사회적 존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권리 보장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입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하며 이번 좌담회를 주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인 남미자 미래교육팀장(경기도교육연구원)은 그동안 우리가 청소년의 기본권으로서 제대로 인정해 주지 못했던 노동권, 집회 시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와 같은 것들을 좀 더 가시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가 기존 법체계에서 청소년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지원

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 다음으로 노자은 혁신자원개발(군포시청소년재단 사회적가치혁신센터) 팀장은 조례에 담을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각호를 특정해 구체화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김윤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 정치 참여 교육 재조정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자신한테 영향을 미치는 일상의 이슈가 합의의 다양한 가치들을 재분배하는 활동이 공공의 가치로 환원될 수 있다는 이해를 독려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청소년 정치 참여 교육의 지향점"이라며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판단력을 함양하는 인적 지식습득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안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한비(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하나 조례에 명시된 조항의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부분이 사각지대로 남아 상대적으로 등한시될 수 있음을 고려해 조례 항목에 녹여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창 기자

부평지하상가 활성화 '한마음'

김병기 인천시의회 의원 "패션·디자인 역량 강화"

김병기 인천시의회(산업경제위원회) 의원이 최근 부평구청에서 부평지하상가, 한국뉴욕주립대학 패션기술대학교 (FTT)·부평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부평지하상가 패션·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차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부평지하상가와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대학으로 미국 3대 패션스쿨인 뉴욕주립대학 패션기술대, 문화도시 부평구 등 3자 협업을 통해 상인멘토링 서비스, MZ세대를 위한 소비문화공간 창조, FTT패션쇼 등의 사업을 추진해 부평지하상가의 패션과 디자인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올해 사업 추진 일정 소개, 소요예산 반영 시점 설명,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



김병기 인천시의회 의원이 최근 부평구청에서 부평지하상가·한국뉴욕주립대학 패션기술대학교·부평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부평지하상가 패션·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인천시의회)

향후 추진방향 및 개선사항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병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천의 자랑인 부평지하상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뉴욕을 패션의 도시로 거듭나게 한 FTT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부평 지하

상가 상인들의 오랜 사업경험과 접목하기 위해 간담회를 준비했다"며 "지속가능한 사업을 통해 부평지하상가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과 차준택 부평구청장도 참석

해 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신은호 의장은 "역사와 규모 면에서 세계적인 부평 지하상가가 오늘 간담회로 더욱 발전하기 바란다"고 격려했고 이어 차준택 구청장도 "부평지하상가 활성화를 기대하며 부평구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종삼 기자

다음달부터 지방선거 본격화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사무 안내를 실시한다.

도선관위는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방식의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대신, 입후보예정자 대상 사전 안내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 안내 영상을 제작해 활용할 예정이다.

총 4편으로 구성된 영상은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 행위 △후원회 등록 및 후원금 지급 안내 △선거여론조사의 이해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며 해당 영상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선거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선관위는 '선거사무안내 책자' 및 '각종 안내문서'도 함께 메일과 우편을 통해 입후보예정자에게 송부할 계획이다.

한편 도선관위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소그룹 대면 안내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안내를 원하는 입후보예정자는 도선관위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며 시장 및 지역구 도의회의원과 지역구 시의회의원은 18일부터 군수 및 지역구 군의회의원은 3월20일부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김인창 기자

정신장애인 문제... "가족지원이 우선"

최종현 경기도의회 의원 정신장애인가족협 정담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민주당, 비례)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정신장애인가족 단체 관계자들과 정신장애인이 겪는 문제 해결 방안, 가족지원활동가의 참여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 이진순 회장, 수원시정

신가족협회 고경희 회장,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하경희 교수가 참석해 가족지원활동가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에 따르면 가족지원활동가는 '당사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정신장애인가족을 말한다.'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기본 교육(3일 22시간), 심화1단계(8일 50시간), 심화2단계(5일 26시간, 실습)

로 구성된 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 중이다.

가족지원활동가는 이러한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정신장애인의 가족에게 정신질환 대처방법과 가족의 역할 등을 상담해주는 활동을 한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당사자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가족지원활동가가 정신질환 증상과 약물복용 정보, 회복과 자립생활지원, 가족 내 스트레스 관리법 등을 교육·상담하는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신장애인가족이 겪는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법은 같은 고민

을 했던 당사자의 가족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정신장애인가족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을 방문했을 때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털어놓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신장애인의 곁에서 24시간 동안 함께하고 지지해주는 가족이 겪는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그동안 방치한 경향이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인가족을 지지하고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때, 정신장애인당사자도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인창 기자

여의도 소식

청소년국민투표법 발의

이탄희 의원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에 고3 청소년들이 투표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이탄희(민주당, 용인정·사진) 의원은 20일 국민투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발맞춰 이뤄졌다.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연령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원의 생각이다.

실제 공직 선거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만 18세로 확대됐음에도 국민투표만 여전히 만 19세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



치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지난 2005년 선거권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 이래 꾸준히 계속돼 왔다. 2007년에는 국민투표권 가능 연령이 만 19세로 확대됐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만 18세 청년들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특히 21대 총선의 경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큰 일조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류근상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

김성원 의원

김성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사진) 의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 원화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산권 침해'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안정을 위해 26차례의 대책을 발표했던 바 있으나 집값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행해진 징벌적 과세, 강화된 거래 규제, 과도한 대출 규제 등이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논란이 꾸준히 있어 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시장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 시장을 무시한 막무가내식 정책을 국민에게 강요한 주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집값 안정의 실패뿐 아니라 개인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국



민의 자기결정권을 토대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현 정부의 편향된 시각을 개선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윤창현 국회의원이 주제 발표를 맡기로 했다. 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정한 한국입법연구원 상임 고문, 최호웅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과 박승제 신아시아 안보연구소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한성태 기자

백신접종 후 119신고 늘었다

최춘식 의원

최춘식(국민의힘, 포천·가평·사진)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백신을 첫 접종한 지난해의 119구급대 신고건수가 과거 5년 평균치보다 15만건이나 늘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소방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9구급대 신고건수는 241만854건으로 과거 5년(2016~2020년)간 평균 신고건수인 225만 9024건 보다 총 15만 1830건이 증가했다.

특히 월별로 보면 지난해 1월(16만 6736건)은 과거 5년 평균 신고건수(18만 380건)보다 적었지만 지난해 2월26일 백신이 국내에서 첫 접종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119구급대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백신을 접종할수록 119신고건수가 감소해야 하는데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119신고건수도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백신이 코로나 감염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과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을 동시에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은 최근에 백신패스철매 법안을 발의하거나 4차 접종 시 돌파감염 가능성에 대해 질병청이 답변을 거부했다는 것을 포집하는 등 방역과 관련된 발언을 잇따라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학 기자